글로벌 인구구조 변화의 거시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윤상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
syoon@kiep.go.kr

김효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금융팀장
hyosangkim@kiep.go.kr

연지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안보실 부연구위원
jyeon@kiep.go.kr

윤정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 연구위원
jyoon@kiep.go.kr

송예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 연구원
syena@kiep.go.kr

이지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 연구원
ljy08@kiep.go.kr

최상엽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부교수
sangyupchoi@yonsei.ac.kr

허진욱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조교수
jhur@sookmyung.ac.kr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차 례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조사 및 분석 결과
3. 정책 제언

주요 내용

▶ 본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저출생 및 고령화라는 인구학적 전환이 초래하는 한국경제에 대한 거시경제적 파급효과를 다각도로 분석함.

▶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중립금리] 한국의 장기 중립금리는 생산성 둔화, 인구구조 전환, 글로벌 안전자산 수급 요인 등으로 인해 구조적으로 하락해 왔으며, 향후 인구 고령화 심화에 따라 추가적인 하방 압력이 지속될 전망임.
- [생산성] 고령화는 무형자산 투자 효율의 저하를 유발하여 총요소생산성과 산출량을 감소시키는 경로로 작용하나, 개방경제 하에서 글로벌 금리 하락에 따른 자본심화가 이러한 부정적 충격을 일부 완충하는 효과가 확인됨.
- [산업·무역] 한국 단독의 고령화는 노동집약적 제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나, 전 세계적인 동시 고령화 시나리오에서는 한국의 인지·기술 집약 제조업이 상대적 비교우위를 가질 가능성이 있음.
- [재정] 인구구조 변화만으로도 의무지출이 급증하여 재정여력이 빠르게 축소되며, 세율 인상만으로는 재정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임.
- [대외부문] 국내 요인만 고려 시 2041년 경상수지 적자 전환이 예상되나, 글로벌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하면 해외 요인의 상쇄 효과로 적자 전환 시점이 2059년으로 지연

▶ 분석 결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제언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음.

- [통화정책] 구조적 저금리 환경에 대비하여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범위(range) 기반의 중립금리 상시 추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생산성 제고] 무형자산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세제·회계·금융 제도의 유·무형자산 간 중립성을 확립하고, 데이터 및 표준 등 기술 확산 인프라를 확충해야 함.
- [산업·무역] 인지·기술 집약 산업의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고 서비스업의 무역 가능성을 확대하는 한편,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에 맞춘 산업별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함.
- [재정·대외] 재정지출 효율화와 구조개혁을 통해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대외적으로는 순대외자산의 규모 확대와 수익률 제고를 통해 소득수지를 강화함으로써 무역수지 약화를 보완하는 전략으로 전환해야 함.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글로벌 및 한국의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 전 세계는 기대수명의 연장과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로 인해 '인구학적 전환(Demographic Transition)'을 겪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사회적 변화를 넘어 경제의 기초 여건을 뒤흔드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 세계 인구는 증가세가 둔화된 후 금세기 후반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나, 한국은 이미 인구 정점을 통과하여 감소 국면에 진입하였으며 그 속도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수준임.
  - ○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을 지속하고 있으며, 2050년경에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40%를 상회하여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국가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노동 공급 감소, 저축 및 소비 패턴의 변화, 사회보장 지출 증대 등을 통해 거시경제 전반에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침. 이는 단순히 노동력 부족의 문제를 넘어 자본 축적, 기술 혁신, 재정 수지, 그리고 국제 수지에 이르기까지 경제의 모든 부문에 걸친 구조적 변화를 의미함.

● 거시경제 핵심 부문에 대한 구조적 파급효과 심화

- [금리 및 금융시장] 인구 고령화는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낮추고 안전자산 선호를 강화하여 실질 중립금리(r*)의 구조적 하락을 유발함. 이는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약하고 자산시장 가격 결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제로 금리 하한(ZLB)'에 도달할 위험을 높여 통화정책의 운용 공간을 축소시킴.
- [성장 및 생산성]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노동 투입을 직접적으로 줄일 뿐만 아니라, 고령화에 따른 사회 전반의 혁신 역량 저하와 무형자산 투자 효율 감소를 통해 총요소생산성(TFP)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노동 투입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이나, 고령화 자체가 생산성 향상을 저해할 수 있다는 딜레마가 존재함.
- [재정 및 대외불균형] 고령층 부양을 위한 연금 및 의료 지출 급증은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며, 생애주기에 따른 저축-투자 갭의 변화는 경상수지와 대외자산 축적 경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킴. 이는 국가 신용등급 및 대외 건전성에도 장기적인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연구의 목적 및 차별성

- 본 연구는 글로벌 인구구조 변화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중립금리, 생산성, 산업·무역, 재정, 대외 부문 등 5대 핵심 영역으로 구분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통합적인 정책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기존 연구들이 주로 국내 인구 요인에 집중하여 분석한 것과 달리, 본 연구는 글로벌 인구구조 변화가 국제 금융시장과 무역 경로를 통해 한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Spillover Effects)'를 명시적으로 고려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짐.
  - ○ 현대 경제는 고도로 통합되어 있어 개별 국가의 인구구조 변화뿐만 아니라 주요 교역국 및 글로벌 차원의 인구구조 변화가 자본 이동, 금리, 무역 패턴을 통해 국내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
  - ○ 특히 개방경제 모형을 활용하여 글로벌 저금리 환경이나 교역 상대국의 고령화가 한국의 생산성 및 경상수지에 미치는 상쇄 또는 증폭 효과를 심층 분석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이고 정교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조사 및 분석 결과

1) 글로벌 인구구조와 한국의 중립금리

① 한국 장기 중립금리의 구조적 하락 추세 확인

- 본 연구는 12개국(한국 포함)을 대상으로 한 '국가 간 상태-공간 모형(Cross-country State-Space Model)'을 이용하여 장기 중립금리를 추정하였음. 분석 결과, 한국의 중립금리는 1990년대 고성장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온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금리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중립금리 하락세는 지속되었으며, 이는 일시적 경기변동이 아닌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이는 한국경제의 기초 체력과 잠재 성장 경로가 구조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음을 시사함.

② 중립금리 하락의 주요 결정요인 분해

- [생산성 둔화] 장기간 지속된 생산성 증가율의 둔화는 자본의 기대 수익률을 낮추어 중립금리 하락의 가장 주된 요인으로 작용함. 기술 혁신의 정체와 자본 축적의 한계 효용 체감이 중립금리 하락을 주도하였음.
- [인구구조 전환] 2015년을 전후로 한국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정점을 찍고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인구 요인이 중립금리를 지지하던 요인에서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급격히 반전됨.

○ 2015년 이전에는 풍부한 노동 공급이 투자수요를 견인하며 중립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으나, 이후 고령화 가속화로 인해 저축 성향 변화와 투자수요 감소가 맞물리며 하방 압력이 강화됨.

- [글로벌 요인] 글로벌 안전자산에 대한 초과 수요와 주요 선진국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글로벌 금리 하락이 금융시장 통합 경로를 통해 한국의 중립금리를 동반 하락시킴. 이는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이 글로벌 금리 추세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여줌.

③ 향후 전망: 추가 하방 압력 불가피

- 국내외 인구 전망(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4)을 반영하여 시뮬레이션한 결과, 향후 인구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한국의 중립금리는 중장기적으로 추가적인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국내 인구 요인만 고려할 경우에도 하락 압력이 크지만, 주요 선진국의 동반 고령화에 따른 글로벌 금리 하락 효과까지 감안하면 한국의 중립금리는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거나 더 하락할 수 있음.
- 이는 향후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 '저금리 장기화(Low for Longer)' 환경이 뉴노멀(New Normal)이 될 것임을 시사하며, 경기 침체 시 정책금리를 충분히 인하하지 못하는 제로금리 하한(ZLB) 제약에 직면할 위험이 증대됨을 의미함.

표 1. 각 요인이 중립금리에 미치는 영향

구분	주요 결정 요인	영향의 방향	비고
생산성	총요소생산성(TFP)	▼	기대수익률 하락으로 투자수요 감소
인구구조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2015년 이후)	▼	2015년 이전에는 상승 요인, 이후 하락 요인으로 반전
글로벌 요인	안전자산 선호, 글로벌 고령화	▼	국제 금융시장 연계를 통한 동조화 현상

자료: 윤상하 외(2025), 「글로벌 인구구조 변화의 거시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연구보고서 25-1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 글로벌 인구구조와 한국의 생산성

① 고령화와 무형자산 투자 효율의 관계

- 성장회계와 생애주기모형(OLG)을 활용한 분석 결과, 인구 고령화는 경제 주체들의 혁신 성향을 약화시키고 무형자산(R&D, 소프트웨어, 브랜드, 인적자본 등) 투자 효율을 저하시켜 총요소생산성(TFP)과 경제 전체의 산출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고령화된 사회에서는 위험 회피 성향이 강해지고, 새로운 기술 습득에 대한 비용이 증가하여

무형자산 축적이 저해될 수 있음. 이는 지식 기반 경제에서 성장의 핵심 동력인 혁신을 둔화시키는 요인이 됨.

- 분석 시나리오에 따르면, 고령화로 인해 무형자산 투자 효율이 10%p 하락할 경우 총요소생산성은 약 2% 감소하며, 효율이 20%p 하락할 경우 총요소생산성은 10%, 총생산은 6%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됨. 30%p 하락 시 충격은 더욱 증폭되어 경제 성장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음.

② 개방경제 하에서의 완충 효과: 자본심화

- 그러나 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에서는 글로벌 인구구조 변화가 긍정적인 완충 작용을 할 수 있음이 확인됨. 폐쇄경제 모형과 달리, 개방경제에서는 국제 자본 이동이 가능하므로 글로벌 금리 환경이 중요함.
- 글로벌 고령화로 인해 국제 금리가 하락하면, 자본 비용이 낮아져 국내로의 자본 유입이 촉진되고 이는 자본심화(Capital Deepening)로 이어짐.
  - ○ 자본심화는 노동자 1인당 자본 장비율을 높여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이는 고령화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와 무형자산 투자 효율 저하 충격을 일부 상쇄함.
- 극단적인 가정(투자 효율 30% 대폭 하락)하에서도 개방경제의 낮은 금리 여건을 반영할 경우, 총요소생산성 감소폭은 13%에서 4%로, 총생산 감소폭은 14%에서 4%로 크게 축소되는 효과가 있었음.
- 이는 글로벌 저금리 환경을 활용하여 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하는 정책이 고령화의 부정적 효과를 방어하는 핵심 기제임을 시사함. 즉, 노동 투입의 감소를 자본 투입의 질적·양적 확대로 보완하는 전략이 유효함을 의미함.

표 2. 폐쇄경제와 개방경제 하에서의 총요소생산성과 총생산 변화

시나리오	무형자산 투자 효율 하락폭	총요소생산성(TFP) 변화	총생산(GDP) 변화	비고
폐쇄경제	20%p 하락	-10%	-6%	자체적인 충격 흡수 기제 부재
개방경제	30%p 하락 (극단적 가정)	-4%	-4%	글로벌 금리 하락에 따른 자본심화 효과 반영(폐쇄경제 대비 충격 완화)

자료: 윤상하 외(2025), 「글로벌 인구구조 변화의 거시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연구보고서 25-1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3) 글로벌 인구구조와 한국의 산업 및 무역

① 인구구조 변화와 산업별 직무기술 집약도, 그리고 무역의 비교우위

- 패널 중력모형 분석 결과, 인구구조의 변화는 산업별 직무기술(Task Skill) 집약도와 상호작

용하여 무역의 비교우위 구조를 재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산업별로 요구되는 직무 역량(인지적 능력 vs. 신체적 능력)에 따라 고령화의 영향이 차별적으로 나타남. 청년층 및 대졸 인력 비중이 높고 설비·지식재산 자본 집약도가 높은 산업일수록, 해당 국가의 인구구조가 젊을 때 수출 비중이 높은 상관관계를 보임.
- 반면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신체적 능력이 중요시되거나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의 비교우위는 약화되는 경향이 뚜렷함.

② 고령화 시나리오별 비교우위 변화 전망

- [시나리오 A: 한국 단독 고령화] 전 세계 인구구조는 2014년 수준으로 고정되고 한국만 급속히 고령화되는 반사실적 상황에서는, 노동집약적 제조업 및 신체 능력이 중요시되는 산업에서 한국의 수출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위험이 큼. 노동 공급 부족과 임금 상승 압력이 경쟁력을 훼손하기 때문임.
- [시나리오 B: 글로벌 동시 고령화] 한국뿐만 아니라 주요 교역국들이 동시에 고령화되는 실제 전망을 반영할 경우, 한국 산업의 상대적 강점이 변화함.
  - 글로벌 고령화 환경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노동 공급이 부족해지므로, 자동화가 용이하고 지식집약적인 산업의 중요성이 커짐. 이 경우 한국이 보유한 '인지·기술 집약 제조업(예: 반도체, 바이오, 첨단 장비, ICT 등)'에서의 상대적 비교우위가 오히려 부각될 여지가 있음.
  - 이는 고령화가 전 세계적인 현상일 때, 자본 및 기술 집약적 산업 구조를 선제적으로 구축한 한국이 글로벌 가치사슬 내에서 고부가가치 영역을 선점할 수 있음을 시사함.
- 따라서 향후 산업정책은 노동 투입 위주의 산업보다는 기술과 지식, 자동화 설비가 주도하는 산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함.

4) 글로벌 인구구조와 한국의 재정

① 인구구조 변화와 재정여력의 축소

-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분석 결과, 별도의 정책 변화 없이 인구구조 변화(고령화)만으로도 연금, 의료 등 의무지출이 급격히 증가하여 재정수지가 악화되고 국가채무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소득세 및 소비세 등 세입 기반은 약화되는 반면, 고령층 부양을 위한 복지 지출 소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 이로 인해 한국의 재정여력(Fiscal Space)은 빠르게 축소될 전망이며, 이는 미래 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거시경제 운용의 폭을 제약할 수 있음.

②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 시뮬레이션

-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세 인상(증세)만을 고려할 경우,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됨.
  ○ 노동소득세 인상은 근로 의욕을 저하시켜 노동 공급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으며, 법인세 인상은 기업 투자를 저해할 수 있음.
- 특히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개방경제 환경에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자본소득세율을 과도하게 인상할 경우, 자본 유출(Capital Flight)을 초래하여 국내 투자가 위축되고 성장잠재력이 훼손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이는 세원 자체를 축소시켜 오히려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
- 따라서 증세 중심의 접근보다는 지출 효율화, 과도한 의무지출 구조조정, 엄격한 재정준칙 준수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중장기 재정 프레임워크가 요구됨. 즉, 재정의 수입 확충보다는 지출 통제와 구조 개혁이 재정 지속가능성의 핵심 열쇠임.

표 3. 정책 수단에 따른 재정에의 효과

정책 수단	효과성 분석	부작용 및 한계
단순 증세	재정 수입 증대 효과 제한적	근로 의욕 저하, 투자 위축, 경제 활력 둔화
자본소득세 인상	세수 확보 불확실	자본 유출(Capital Flight) 유발, 성장잠재력 훼손(개방경제 특성)
지출 구조조정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에 가장 효과적	사회적 합의 도출의 어려움, 정치적 비용 발생

자료: 윤상하 외(2025), 「글로벌 인구구조 변화의 거시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연구보고서 25-1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5) 글로벌 인구구조와 한국의 대외 부문

① 인구구조와 경상수지의 비선형 관계

- 패널 다항식 연령구조 모형 분석 결과, 인구구조는 저축-투자 균형을 통해 경상수지에 비선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됨.
  ○ '생애주기 가설(Life-Cycle Hypothesis)'에 따라, 경제활동이 왕성하고 소득이 높은 중장년층 비중이 높을수록 저축률이 높아져 경상수지 흑자 요인이 됨. 반면 은퇴 연령층이 증가하면 소득 대비 소비 성향이 높아져 저축률이 하락하고 경상수지 적자 요인이 됨.

② 국내 vs. 글로벌 인구구조 효과의 상쇄

- [국내 요인만 고려 시] 한국의 급격한 고령화만을 반영할 경우, 은퇴 인구 급증에 따른 저축률

급락으로 인해 한국의 경상수지는 2041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이후 적자 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됨.

- [글로벌 요인 반영 시) 그러나 전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를 함께 반영할 경우, 글로벌 투자수요 둔화 및 해외 저축률 변화 등 대외 요인이 국내 고령화의 부정적 효과를 일부 상쇄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글로벌 고령화는 전 세계적인 투자수요를 위축시켜 자본재 수입 압력을 낮추거나, 해외 자산 수익률 변화를 통해 소득수지에 영향을 미침.
  - 이 경우 경상수지 적자 전환 시점은 2059년으로, 국내 요인만 고려했을 때보다 약 18년 지연되는 효과가 있음. 이는 한국의 대외균형이 글로벌 인구 트렌드와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음을 보여줌.

③ 소득수지의 중요성 부각

- 상품수지(무역수지)는 노동비용 상승과 생산성 둔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장기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 제조업 경쟁력 약화는 상품수지 흑자 기조를 위협할 것임.
- 반면, 소득수지는 순대외자산(Net Foreign Assets)의 축적 규모와 투자수익률에 좌우됨. 분석 결과, 향후 무역수지 흑자가 축소되더라도 그간 축적된 대외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이자 소득(본원소득수지)이 경상수지의 핵심적인 완충 장치(Buffer)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됨.
  - 이는 한국이 '무역 강국'에서 '투자 강국'으로 대외경제 구조의 중심축을 이동해야 함을 시사함.

3. 정책 제언

●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글로벌 인구구조 변화가 한국경제에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5대 부문별 통합적 정책 대응이 시급함을 시사함.

① [통화정책] 중립금리 하락에 대비한 통화정책 체계 고도화

-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 정비: 구조적 저금리 기조로 인해 정책금리가 실효 하한(Effective Lower Bound)에 도달할 빈도가 높아질 것에 대비하여, 양적완화, 포워드 가이던스 등 비전통적 수단 활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함. 위기 시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사전적 준비가 필요함.
- 중립금리 모니터링 강화: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정교한 모형을 통해 중립금리를 상시 추정하고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점(point) 추정보다는 범위(range) 기반의 추정 체계를 구축하여

통화정책의 기준점으로 활용해야 함.

- 정책 조합(Policy Mix) 강화: 통화정책의 여력이 축소될 수 있으므로, 거시건전성 정책 및 재정정책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거시경제 안정을 도모해야 함. 금융 불균형 누증을 방지하면서 경기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간 역할 분담이 중요함.

② [생산성] 무형자산 투자 생태계 조성 및 효율성 제고

- 유·무형 자산 간 중립성 확립: 세제, 회계, 금융 시스템이 유형자산(설비, 건설) 중심에서 벗어나 무형자산(R&D, SW, 데이터, 지식재산) 투자에 대해서도 동등하거나 우호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개편해야 함.
  - ○ 무형자산 투자의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분담할 수 있는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기술 금융 활성화를 위해 무형자산의 담보 가치 인정 범위를 확대해야 함.
- 기술 확산 인프라 확충: 고령화로 인한 혁신 저하를 막기 위해 데이터 공유 플랫폼, 기술 표준화 등 지식과 기술이 경제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함.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생산성 격차를 줄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임.
- 인적자본 고도화: 고령 인력의 생산성 유지를 위해 평생학습 체계를 강화하고,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직무 전환(Reskilling/Upskilling) 지원을 확대해야 함.

③ [산업·무역] 기술 집약적 비교우위 강화 및 서비스 무역 확대

- 초격차 기술 확보: 글로벌 고령화 시대에 한국이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인지·기술 집약적 제조업(반도체, 바이오, AI 등)에 대한 R&D 지원을 집중하여 기술 초격차를 유지해야 함. 이는 노동 투입 감소를 기술 우위로 극복하는 전략임.
- 서비스업 무역화: 제조업에 편중된 수출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육성과 서비스 무역 활성화를 추진해야 함. 디지털 무역 등 새로운 무역 형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수출 저변을 확대해야 함.
- 공급망 재편 대응: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글로벌 가치사슬(GVC)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문별 가치사슬 특성에 맞춘 맞춤형 통상 전략을 수립해야 함. 주요 교역국의 인구구조 변화가 한국의 중간재 수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대응해야 함.

④ [재정] 지출 구조조정과 중장기 재정규율 확립

- 지출 효율화 최우선: 증세는 경제 활력을 저해하고 자본 유출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의무지출의 자연 증가를 억제하고 관행적인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지출 구조조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함.

- 사회보험 개혁: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고령화와 직결된 사회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 개혁을 조속히 단행해야 함. 이는 미래 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임.
- 재정준칙 법제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고, 단순한 단년도 예산 편성을 넘어 중장기 재정 소요를 반영한 시계열적인 재정 운용 계획을 수립해야 함.

⑤ [대외전략] 소득수지 중심의 경상수지 관리 전략 전환

- 순대외자산 확대: 무역수지 흑자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경상수지 안정을 위해 순대외자산의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함. 경상수지 흑자가 유지되는 현시점에서 해외 우량 자산을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함.
- 투자 수익률 제고: 국민연금, KIC 등 공적 연기금과 민간 부문의 해외투자를 활성화하고, 투자 다변화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해 해외자산의 운용 수익률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함.
  - ○ 이를 통해 무역에서 번 돈보다 해외자산에서 벌어들이는 소득(배당, 이자)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는 선진국형 국제수지 구조로의 전환을 가속화해야 함. 이는 고령화 시대에 안정적인 국부 창출 경로가 될 것임. KIEP